

하였다. 1915 년 까지는 기상관측망(氣象觀測網)을 대략 완성하고, 민력(民曆)을 만드는 등, 농업 사회 통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 확립에 주력하였다.

그들은 통치에 이용하기 위하여, 구관조사(舊慣調査)에 착수하여, 1908 년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을 설치하였고, 1915 년에는 총독 정치의 자문기관(諮問機關)인 중추원(中樞院)에 그 사무를 이관하였다. 이어 조선 사료(史料) 조사와 고적(古蹟) 조사에 착수하여, 삼년 간에 조선사가 편찬되었으며, 1909 년부터는 세키노(關野貞, Sekino) 등이 한국의 유적·유물(遺物)을 조사하며, 또 한편 1911 년부터는 따로 선사 시대(先史時代) 유적·유물 조사도 진행하였다. 이어 총독부에서 1916 년 박물관(博物館)을 설치하였다.

1919 년 3월 1일의 독립선언과 전국에 걸쳐, 시위 운동이 전개되자, 횡포한 학살(虐殺)과 탄압으로 억누르며, 조선 사람에만 적용하는 치안유지(治安維持)에 관한 법규(法規)로서 보안법(保安法)을 공포하여, 우리들의 정치 운동을 탄압하였다. 3월 1일 운동을 계기로 총독 정치의 방침을 바꾸어 조선·동아의 두 개의 우리말 신문 발간을 허가하고(1920), 서울에 식민지 통치의 촉탁연구 기관으로서의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이 창설되었다. 1922 년에 조선 미술진람회(朝鮮美術展覽會)를 개최하기 시작하며, 조선사(朝鮮史) 편수(編修)를 계획하여 일본인의 손으로 착수하였다. 이에 얼마의 한국 사람들도 고용되었다. 이로써 지방사료(地方史料)의 탐방을 개시하여, 여러 가지 귀중한 고문서(古文書)·고기록(古記錄) 등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찬에 이용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귀중한 것은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으로 간행되었다. 1919 년 지방제도가 개혁되었고, 1931 년 지방 자치제도(自治制度)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법령은 주제가 일본이 되고, 우리들은 종속되도록 되었다. 뒤를 이어 농산어촌(農山漁村)의 전흥과 자력갱생(自力更生) 운동을 일으키어 피폐한 농촌을 정치적으로 수습하기에 힘써 농산물의 증산을 꾀하였고, 또 산금(産金) 장려를 하였다. 산업 장려와 함께 전력(電力) 통제를 계획 실시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산업 경제 기구를 일본에 계속 이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었다. 또 농촌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금융조합(金融組合)을 중앙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1928 년 금융조합연합회(聯合會)를 설치하였다. 1936 년 이후에는 만주 사변 이후 중국 대륙 침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애를 쓰던, 일본의 전진기지(前進基地)로 취물가 놓게 되며, 1937 년 7 월부터 중국 침략을 개시하면서 한국은 완전히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로 통제하며,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하며, 성명(姓名)까지 고쳐서 일본식에 따르는 등, 형언키 어려운 폭정(暴政)의 계속은 드디어 우리들을 강제 노동에 몰아 넣고, 마침내 1943 년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며, 일본 침략군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여, 젊은 청년과 학도들을 그들의 군문(軍門)에 서게 하였다. 이 뿐 아니라, 종래 자기네들이 이용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하던 우리 문화의 조사 연구도 중지하고, 우리말로 간행되던 신문 잡지의 간행을 중지하며, 민족적인 문화의 박멸이 전개되었다. 이런 암흑 속의 고민은 1945 년 8월 15일 일본의 군

민족성 말살 정책의 강행

만주 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제 3기로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는 병참 기지화를 서두르는 한편, 정치적으로는 민족성 말살 정책을 강행하게 되었다. 내선 일체, 동조 동근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걸고 황국 신민화 운동이라는 것을 내세워 강행된 이 정책은 세계 식민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교육을 통한 민족성 말살이 첩경이라고 생각한 일제는 교육에서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국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고, 아침마다 궁성 요배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서사를 제창시켰다. 또, 신사 참배를 강요하여 이에 불응하는 애국 지사를 투옥 살해하였고, 심지어 학교를 폐쇄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일반에 대해서도 신사 참배, 정오 묵도, 일어 상용을 강제하였으며, 우리말로 발행되던 일간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끝내는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을 하게 하는 만행을 부렸다. 강압적인 민족성 말살 정책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반발은 컸으나, 그들은 헌병과 고등계 형사를 동원하여 탄압하였으며, 심지어는 사상범 예방 금지령이라는 악법까지 제정하였다.

인적 자원 의 수탈

일제의 착취는 경제적 착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인적 자원의 수탈에도 미쳤다. 중·일 전쟁이 시작되어 침략의 무대가 확대되고, 또 장기간의 전쟁으로 일본 인구의 고갈을 염려하게 된 일제는 전선으로 우리 청년을 끌어내고, 산업 전선으로는 남녀의 노동력을 징발하였다. 1938년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였고, 마침내 징병제, 학



노동력 징발에 끌려 가는 우리 여성들

병제를 시행하여 수대한 우리 청년과 학도들을 전선으로 끌어내었다. 또,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한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폭발된 후로 징용령을 실시하여 막대한 노동력을 공장, 광산, 군사 기지로 끌어갔으며, 심지어 연약한 여성들까지도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리하여, 아시아 전역에서 비명에 죽고 고초를 당한 우리 동포는 수백만이나 되었다.

전통을 완전히 말살시켜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내선 일제, 일선 동조론, 황국 신민화와 같은 허황된 구호 아래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없었다. 또,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는 물론, 심지어 우리의 성명마저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당하였다. 일제는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옥, 살상까지도 서슴지 않았으며, 이러한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종교 계통의 학교는 폐쇄되었다.

또, 우리 민족은 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당하였고, 우리의 청년들은 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또 징병제와 징용령에 의해 일본, 중국, 사할린, 동남아 등지로 강제 동원되어 목숨을 잃었으며, 여자들까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일본군의 위안부로 희생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와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모든 정책이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수단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었으며, 시설의 설비 투자 역시 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경제 약탈

토지의 약탈

개항 이후, 우리 나라는 일제의 자본주의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일본의 통신·교통, 시설의 점유와 확대, 화폐 금융의 침식 등 경제적 침투를 막지 못한 채 국권을 침탈당하였다.

국권 피탈 후, 각종 산업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로 개편되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농업 부문에서 단행된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으로 그 목적은 전국적인 토지 약탈에 있었다. 국권 강탈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는 법령을 제정한 바 있었던 일제는, 이어서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막대한 자금과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제도를 확립한다고 선전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농민은 토지 소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토지 신고제가 농민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신고 기간이 짧은 데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여 신고의 기회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일제가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인의 토지를 빼앗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 농민들 중에는 일제의 시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족 감정 때문에 신고를 고의적으로 기피하여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많았다.

일제는 이와 같은 미신고 토지는 물론, 공공 기관에 속해 있던 토지, 마을이나 문중의 토지와 산림, 초원, 황무지 등도 모두 조선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해 불법적으로 탈취당한 토지는 전 국토의 약 40%나 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탈취한 토지를 동양 척식 주식 회사를 비롯한 일본인의 토지 회사나 개인에게 헐값으로 불하하였다. 하루 아침에 토지를 약탈당한 농민들은 일제 당국에게 그 부당함을 들어 항의하였으나, 일제 당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하여 외면하였다.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의 실시는 한국 농민의 생활 기반을 철저히 무너뜨렸다. 종래 농민은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토지 조사 사업 이후 많은 농민은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생활 기반을 상실한 농민은 일본인의 고리대에 시달리게 되었고, 생계 유지를 위해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산업의 침탈

일제의 식민지 경제 정책은, 우리 나라의 미곡과 각종 원료를 헐값으로 사 가고, 일본에서 만든 제품을 들여와 비싼 값으로 팔아 이종으로 착취하는 것이었다.

조선 총독부는 우리 농민을 몰락시키는 토지 조사 사업 이외에도 임업, 어업, 광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철저한 착취 정책을 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산업 경제 활동은 일제가 설립한 금융 조합, 농공 은행 등을 통해 통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민족 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회사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회사령은 기업의 설립을 총독의 허가제로 하고, 허가 조건을